

## 제목

## 최근 중국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및 전망

4월부터 시행된 대규모 부가세 환급의 영향으로 재정수입이 큰 폭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판매수입도 축소되면서 **재정지출 여력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하반기중 특별국채 발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

## 1. 최근 재정수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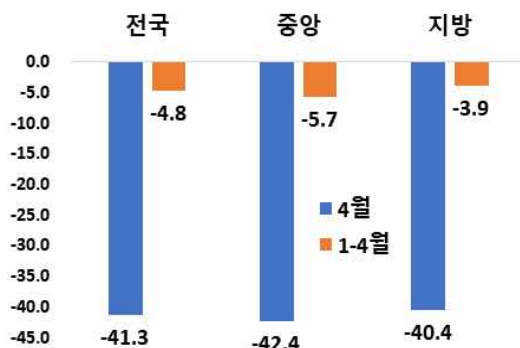
□ **(수입)** 재정수지 통계에 따르면 **4월중 전국일반공공예산수입**은 1.23조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41.3% 감소**하여 사상최대폭 감소를 기록(5.17일, 재정부)

○ 이는 4월 시행된 **부가세 환급정책\*의 영향**으로 국내부가세가 전년동월대비 124.7% 감소(2021.4월 6,303억위안 → 2022.4월 -1,555억위안)한 것이 주된 요인

\*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용하여 왔던 부가세 환급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영세기업 및 6개 업종 기업에 대해 기업내 부가세 유보액 전액을 금년중 한꺼번에 환급. 자세한 내용은 3.25일 북경사무소 현지정보 「중국정부, 대규모 부가세 환급을 통해 기업 지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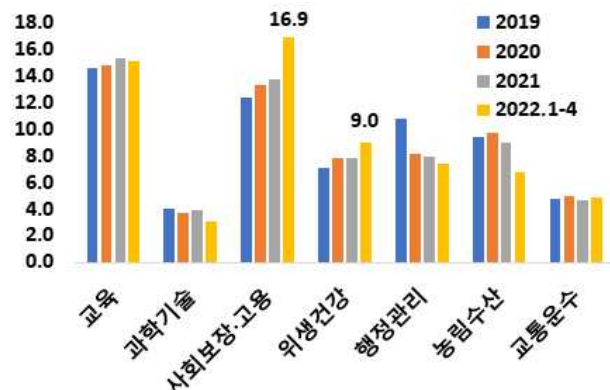
— 부가세 환급 정책이 시작된 4월중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목표액(1.5조위안)의 절반이 넘는 **8,015억위안의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일반공공예산 수입의 37.5%에 해당되는 규모

재정수입 증가율(%)



자료 : WIND, 재정부

주요 부문별 재정지출 비중(%)



자료 : WIND, 재정부

○ 1~4월 누계기준 예산수입은 7.43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8% 감소

— 세수 수입(6.23조위안)이 7.6% 감소하였으나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 및 광산자원 특별수입 등 비세수 수입(1.20조위안)이 13.4% 증가하여 전체 수입 감소폭은 축소

□ (지출) 코로나19 방역과 영세기업 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1~4월 전국일반공공예산지출은 8.09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

○ 사회보장·고용 및 위생건강 부문 지출이 일반공공예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6.9% 및 9.0%로 지난해 연간(각각 13.7%, 7.8%)에 비해 크게 상승

## 2. 최근 재정관련 우려

□ (세수 감소) 부가세 환급정책 시행에 따른 국내부가세 세수 감소는 예상된 바였으나 최근 중국경제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여타 세수도 감소세

○ 금년도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에서 정부는 일반공공예산수입을 전년대비 3.8%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세수 감소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전망

— 부가세 환급 정책의 가속화를 통한 효과 제고를 위해 영세기업과 제조업 등에 대한 환급 시기를 당초 금년 내에서 상반기중으로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며, 동 규모도 당초 1.5조위안에서 1,400억위안 증액한 1.64조위안 규모로 확대

○ 4월 공공예산수입은 수입(輸入) 부진, 소득 감소,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 주요항목인 수입부가세가 둔화되고 기업 및 개인 소득세, 계약세 등도 줄면서 부가세 환급 요인을 제외하고도 전년동월대비 4.5% 감소한 상황

□ (정부성기금수입 감소)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이 대부분을 차지(2021년 기준 88.8%)하는 정부성기금예산수입도 크게 감소

○ 1~4월 정부성기금예산수입(1.76조위안)은 국유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29.8% 감소한 1.5조위안에 그치면서 전년동기대비 27.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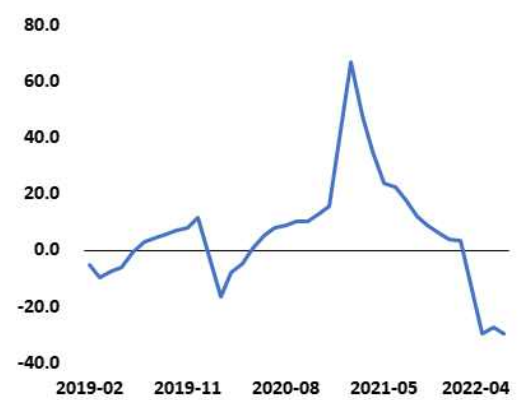
\* 금년중 1회차 토지집중경매에서 텐진(天津)의 경우 30필지중 6필지만이 낙찰되었고 동관(东莞)은 8필지중 2필지, 난징(南京)은 20필지중 14필지만이 거래성사됨(粤开证券)

주요 세수별 증가율(YOY, %)

세 목	비중 <sup>1)</sup>	2021	2022	
			4월	1~4월
총 세수	100.0	11.9	-47.3	-7.6
국내부가세	36.8	11.8	-124.7	-28.9
수입부가세및소비세	10.0	19.1	0.2	17.8
(수출환급세)	(-10.5)	(33.2)	(21.6)	(28.4)
국내소비세	8.0	15.4	14.3	15.5
기업소득세	24.3	15.4	-1.3	5.3
개인소득세	8.1	21.0	-9.5	11.4
계약세	4.3	5.2	-43.4	-27.4

주 : 2021년 기준

토지사용권 판매수입 증가율(YOY, %)



자료 : WIND, 재정부

□ **(재정지출요인 증대)** 반면 중국정부가 **제로코로나 방역정책을 고수**하면서 **재정 지출 증가요인**은 더욱 커지는 상황

○ 방역강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업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비용인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민생보장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검사의 상시화 등 방역활동을 위한 의료부문 지출도 빠르게 증가

— 중국정부는 금년들어 5.16일까지 부가세 환급 1.1조위안, 신규 감세 및 비용인하 1,980억위안, 세금납부연기 3,778억위안 등 총 1.6조위안 규모의 현금흐름을 중소영세기업 등에 제공한 것으로 발표

○ 또한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5.23일)에서 경제안정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정책을 망라한 6개 부문 33개 대책\***을 추가 발표하고 5월말까지 후속대책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관련 재정지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

\*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참고> 「중국정부의 경제안정을 위한 6개 부문 정책」 참조

### 3. 종합 평가

□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로 **정책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대응 여지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산수입의 감소**는 금년 성장 목표(5.5%) 달성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대응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임**

○ 금년 계획한 1.64조위안의 부가세환급을 조기에 완성할 경우 하반기 일반 공공예산수입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겠으나 부동산경기 둔화로 지방정부의 정부성기금예산수입은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취약, 인구 유출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

\* 금년중 부가세 환급용 특별목적 교부금 0.8조위안을 포함하여 지난해보다 1.5조위안 많은 9.8조위안의 지방교부금을 책정한 바 있으며, 최근 특별목적 교부금을 중전 0.8조에서 1.2조위안으로 확대

○ 반면 재정지출은 당초 예산안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민은행 등 국유기관의 축적이윤(1.65조위안)을 국고로 납입토록 한 재정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년중 **재정적자 규모(목표치 2.8%)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부채(중앙 및 지방)는 2022.3월말 기준 명목GDP 대비 47.2% 수준

□ 한편 인프라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방역 및 민생정책을 위해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하반기중 특별국채 발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中泰証券, 天风証券, 平安証券 등)

\* 1998년 국유상업은행 자본 보충(2,700억위안), 2007년 중국투자공사 설립(1.55조위안), 2020년 코로나19 대응(1조위안) 등 지금까지 총 3차례 특별국채를 발행한 바 있음

<참 고>

### 중국정부의 경제안정을 위한 6개 부문 정책

부 문	주요 내용
재정정책	더 많은 업종에서 부가세 환급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금년중 환급규모를 당초 2.5조위안에서 2.64조위안으로 1,400억위안 확대
	영세기업, 자영업자에 대해 수도·전기세와 임대료 지원 확대.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및 해가 큰 5개 업종에 대한 사회보험(양로, 실업, 산재)의 납부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해당되는 업종범위도 확대(금년중 납부유예 총액 3,200억위안 추산)
	실업보험 훈련보조금 지급대상을 모든 보험가입 기업으로 확대
	대학졸업생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금년중 지방정부전용채권 발행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사용범위를 신형인프라 투자까지 확대
금융정책	국가유자보증기금의 신규 재보증 규모를 1조위안 이상 증액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 화물차 대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주택대출, 소비대출에 대해 은행이 연내에 원리금 상환을 연기
	자동차중앙기업(央企)의 900억위안 상용화물차 대출금은 은행과 기업이 협력하여 원리금 상환을 반년 연기
	금년중 금융포용 영세기업 대출지원프로그램의 한도와 지원비율을 두 배로 확대
	상업어음의 지급기한(만기)을 최장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산업공급망 안정	플랫폼기업의 국내외 상장을 추진
	조업재개와 생산확대 정책을 개선하고 “화이트리스트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원활한 화물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저위험지역에서 온 화물운전자의 통행제한을 취소하고 불합리한 제한규정 및 비용징수 등을 폐지
	여객 및 화물운송 기사의 타지역에서의 핵산검사비용도 무료 혜택 제공
	민영항공기업에 대한 1,500억위안 규모의 긴급대출과 항공업의 2,000억위안 채권발행을 지원
소비 및 투자 촉진	순차적으로 국내국제 여객항공편을 증편하고 외국기업 인사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
	자동차 구입 제한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일부 승용차 구입세 600억 위안을 감면
	도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주택구입 수요를 지원
	대형 관개사업, 교통, 노후주택 개선, 지하통로관사업 등에 대한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은행이 장기대출을 제공하도록 유도
	농촌 도로건설 프로젝트 개시
에너지 안전 보장	3,000억위안 규모의 철도건설채권의 발행을 지원
	공공근로사업(以工代赈) 확대
	각 지방별 석탄 생산량 책임을 구체화하고 탄광정책을 조정하여 생산을 확대
민생 보장	수력, 화력 등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를 착공
	실업 보장, 최저 생활 보장 및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업무를 강화
	사회구호와 보장기준이 물가상승과 잘 연계되도록 보장